

청년

청년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2023. 10. 6.(금) 16:30-19:00

주관: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유니온

배경

2020년 제정된 「청년 기본법」 제2조제1항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밝히고 있다. 청년 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과 관련한 통계수치 및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청년문제의 배경에는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일자리 부족, 가계소득의 악화 등이 있다(보건 사회 연구원, 2016). 또한 부의 세습과 자산 불평등 등 구조화된 사회체제의 복합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COVID-19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는 더 심화되었다. 이는 경제적 위기이며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와 문제는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국외의 사례는 한국 청년의 문제와 상황을 객관화하여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일찍이 청년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EU를 통해 광범위한 교육 및 고용서비스의 개혁을 추진하며 현재 EU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는 한국 청년의 고용 악화, 주거 불안정, 교육 불평등, 부채의 악순환 등 다차원적인 불평등의 실태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뤄지는 청년문제를 사회적 특히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청년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해법을 모색한다.



목표

1. 한국 청년의 다차원적 불평등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을 이해
2. 청년의 권리 실현이라는 목표로 불평등 완화를 대안을 모색
3. 국외 청년정책, 특히 민주적 관점으로 실행해온 청년정책의 사례 공유
4. 청년정책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현재의 청년 담론을 확대

중점 논의사항

첫째, 청년이 겪는 다차원적 불평등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청년 기본법이 시행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청년대상 정책은 소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기관 및 민간영역 등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리고 왜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정당성과 청년이 위치한 불평등 구조의 위치를 살핀다.

둘째, 영역별로 다차원 불평등의 구조를 밝힌다.

청년은 성인으로서 이행기이면서, 특정 시기마다 요구되는 그 사회의 정상적 경로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시 그 경로로 진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특히 불평등은 이행기에 매우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과 자산, 교육과 노동시장, 주거와 가족형성 등의 측면에서 그 구조를 짚어본다.

셋째, 한국 청년의 다차원적 불평등을 민주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청년의 문제를 경제적 문제 및 개인 능력의 문제로 제한하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경제적 문제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하여 재해석하고, 최근 유행하는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를 청년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